

노동계 “대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 부합”...입법 촉구

노동계, 대법원 판결 환영...노란봉투법에 부합 노동부 “판결, 노조법 개정안 근거 사실 아니야”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 책임을 따질 때 노조원 개인의 지위와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 취지와 일치한다며 관련 입법에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시민단체 손잡고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장석우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대법

원은 노동조합과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달리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제동 근거는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논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중 법원이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는 조항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어 이번 대법원 판단의 논리와 이 법의 취지가 어느 정도 부합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를 지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나왔다”며 “대법원의 결정은 정부의 잘

못된 자유민주주의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거부권은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며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입법 간섭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해 합의된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억 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같은 날 원심을 깨고 각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날 “해당 판결이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근 대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불법과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이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부진정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히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최이슬기자



목 축이는 참새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올림픽공원 수돗가에서 참새들이 목을 축이고 있다.

광주·전남·북 돌며 보이스포싱 피해자 현금 가로챈 30대 구속

피해자 8명...1억 9000만 원 상당 빼앗아

광주·전남·전북을 돌며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30대 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이스포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총책에게 넘긴 혐의(사기)로 A(32)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한 달 동안 광주와 전남·북을 돌며 총 8차례에 걸쳐 보이스포싱 피해자들부

터 1억 9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피해자들의 계좌와 현금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중앙지검 검사의 지시를 받아 범죄수익금을 가져가겠다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6일 전남 장성의 한 보이스포싱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빼앗은 것을 시

작으로 같은달 31일 전북 김제의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빼앗은 등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에게 6200만 원을 뺏겼다’는 광주 동구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뒤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서구 화정동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서선욱기자

내국인은 대마, 외국인은 케타민...광주서 잇단 마약사범 적발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으로 소지·투약한 혐의

광주에서 마약을 투약해온 내외국인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으로 소지·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16일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동구 자신의 자택에서 50만 원 상당의 대마초 1g을 소지하고 2차례 피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1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여태 소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

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역 마약 유통 흐름을 추적하던 중 A씨의 대마초 구매 정황을 포착하고 검거에 나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마약 구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산경찰도 같은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인 30대 B씨를 붙잡아 지난 16일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B씨는 15만 원 상당의 케타민 0.03g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B씨가 상업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 입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



안 내부를 수색하던 중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최이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